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2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8일

발 의 자 : 방미숙 의원

1. 개정이유

- 하남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권장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 제4항)
-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근거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 제6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 근거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 제7항)
-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위축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제4항)
-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이 관련성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있게 구성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의2~안 제8조의4)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4월 8일 ~ 4월 14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또한 제5조 제4항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위촉될 수 있어 삭제 하였으며,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조항이 관련성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있게 구성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조 제1항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 육성과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제7항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를 제9조부터 제11조로 변경하고 제9조부터 제18조를 제12조부터 제21조로 변경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u>건설신기술</u>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경쟁력</u>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 <u>육성과 건설신기술</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시 <u>지역업체</u> 의 참여와 <u>지역업체</u>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 <u>인·허가</u> 시 <u>지역업체</u> ----- ----- <u>지역건설</u>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u>지역업체</u> 에서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u>
	⑦ <u>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지정 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u>

제5조(실태조사) ① ~ ③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의2(분할발주)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발주) ① ----- ----- ----- ----- ----- 검토 ·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 ~ 제10조 (생략)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8조의3 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구성) ① (생략)	제1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6조 (생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7조(수당 등)	제20조(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 (생략)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4조의2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6조의2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또는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제31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 제7항,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또는 제68

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 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